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신호숙(서강대학교 강사, 교육학)

I. 머리말

북한은 해방 후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에 주력했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지도이념을 도입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을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소위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사상을 강조함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상대적으로 격하되고 주체사상이 유일한 사상체계로 등장하였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1975년부터 전반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1977년 9월 5일에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방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북한당국은 이념적·제도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교육을 체계화하였다. 80년대 중반에 11년제 의무

교육의 실시를 통해 중등교육 단계까지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이후부터는 고등교육을 보편화하는 전 인민의 인텔리화를 통해 1994년 현재 170여만 명의 인텔리부대가 마련되었음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북한교육의 기본 골격은 해방 후 소련군정기에 형성되었고 그 기본 원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이었다. 1948년 북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국가형성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북한 교육체제의 기본 특성이 이 시기에 마련되고 체계화되었음을 고려한다면 해방 후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해방 한국은 일제의 교육을 폐지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한 새로운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했다. 북한교육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때문에 식민교육의 청산에서 출발했고, 당연히 구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뿐 아니라 소련군의 북한 진주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련의 국가 이익, 북한지도부의 입장, 대중의 교육적 요구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군정 및 북한지도부는 인민교육개혁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간주했으나 실질적인 개혁은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된 뒤에 이루어졌다. 초기 북한의 교육정책 및 성격을 이해하는 관건은 정치체제 형성 과정에서 수행된 학교교육개혁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달려 있다.

현대 북한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초기 교육체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료상의 한계로 이 시기의 교육연구가 거의 공백상태에 있었다. 80년 중반부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지역에서 확보한 ‘노획북한문서’가 출간되고 1990년 한·소 수교에 의한 구소련 교문서들이 발굴됨에 따라 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의 북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를 근거로 초기 북한교육사의 공백을 채워가고 왜곡된 교육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기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수행된 학교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교육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김일성 지도부에 의한 교육개혁의 단행이라는 단선적 분석을 넘어서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소련군정기라는 역사적 조건이 북한 교육정책에 미친 배경, 교육정책 담당자의 형성, 구체적인 학교교육개혁의 내용과 실천 과정 등을 고려하여 다면적·역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방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북한 학교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초기 북한교육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북한교육체제의 원형과 기본적 성격을 해명한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연구일 것이다.

II. 소련군정기 학교교육 정책의 방향

1. 소련의 대북한 교육 지원 정책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평양에 제25군사령부를 설치하고 기타 모든 점령지역에 군사령부 조직인 경무사령부를 설치하였다.¹⁾ 북한의

1) 경무사령부는 각 도와 도 아래의 행정단위인 군에 설치되었다. 북한에 설치된 경무사령부를 보면 1945년 9월 28일에 54개였던 것이 후에는 총 113개로 늘어났다.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해방 사명)』, Изд.2, Москва, 1974, 442쪽; 초기 경무사령부의 임무는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군의 재산과 무기를 파악하고 보전하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각 지

도·시·군 단위에 설치된 경무사령부의 임무는 지역의 질서 유지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소련군은 진주 초기부터 북한의 자생적 조직을 기반으로 한 좌우합작 형태의 지역 인민위원회를 통해 민사행정을 처리해 나갔다. 교육관련 사업에 있어서 소련군 정치담당자들은 각지역 인민위원회 교육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소련군사령부는 인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민정기구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로써 1945년 10월 3일에 25군사령부 산하에 소련 민정기관이 탄생하였다.²⁾ ‘소련민정국’이라는 특별기관을 통해 민간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정책은 46년 초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47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바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교육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학교교육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련민정국의 교육고문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소련의 대북한 교육정책의 대강을 알 수 있는 요강이 1945년 9월 14일에 발표되었다. 소련군사령부는 “인민정부 수립요강”을 발표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인민정부 수립요강에 제시된 교육관련 조항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5. 개인 경영의 기술기관은 허여하나 특별한 감시를 요한다. 모든 문화시설과 위생설비 및 교육기관은 국가경영으로 이관하여 노동자·농민에게 개방을 요한다.”³⁾ 교육 및 문화기관의 기본정책으로 국유화를 제안하였고 초기단계의 조치로 사립 기술기관을 허용하지만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교육 및 문화기관

역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하였다. 앤. 게. 레베데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면”,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서울: 도서출판함성, 1989), 94쪽.

2) 민정기관은 1947년 5월 주북한 소련민정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소련민정국의 설치 목적, 설치 부서와 그 책임자들의 명단과 활동에 대해서는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 분석: 해방~1948. 1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1998년 창간호), 131~140쪽을 참고할 것.

3)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연보』 (서울: 문우인서관, 1946), 118~119쪽.

의 국유화 정책은 향후 교육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폐지하여 국가경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사상을 고취시켰던 수많은 기독교계 학교, 전통적 학교형태인 서당, 기타 사립학교들을 국가의 관할권으로 이양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노동자·농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은 임시인위가 성립된 직후에, 1945년 9월 16일 “인민정부 수립요강”에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제출하고 있다. 1946년 3월 20일부터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소련은 내부분서인 “미소공위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했다. 1946년 3월 10일자로 작성된 이 지침서에는 한국임시정부가 반드시 기초해야 할 정치강령 20개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정강 제8항에서 “모국어로 자유로운 초등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영인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확대할 것”⁴⁾을 제시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소련이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교육기관의 국가경영’으로 압축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련의 학교정책은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차별적 식민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희망하고 있던 북한지도부 및 대중들의 교육개혁의 요구와 합치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1946년 2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실천에 옮겨졌다.

한편, 소련의 대북한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발표문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1945년 9월 20일에 북한 내 소련군 지휘자에게 스탈린의 지침서가 하달되었고,⁵⁾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9월 27일과 10월 12일에 두 차례에 걸쳐 스

4) ЦАМОФ, ф.19, оп.267, д.8, лл.90~91.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이를 위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1946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회담을 거친 후 3월 20일부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소련측은 한국임시정부가 반드시 기초해야 할 강령으로 20개조를 작성하였다.

5) 1945년 9월 20일에 하달된 스탈린의 명령서 중에서 최근에 공개된 “① 북한 내에 소련형

탈린의 지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위에 발표한 포고문들의 내용은, 소련은 북한에 소비에트체제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통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가 아니라 우선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에서 급속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에서의 해방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반제·반봉건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말에 불어닥친 신탁통치 정국은 소련의 정책을 재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소련은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인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통해서 북한에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조선문제 결정사항을 둘러싸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당이 신탁통치를 거부하였다. 조선민주당과 공산당과의 통일전선이 결렬되고, 소련군정은 좌파 중심의 정치지형을 구축하게 된다. 즉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1946년 2월 8일에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⁶⁾ 임시인위는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에 기초한 ‘민주개혁’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이어서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고, 북한의 문건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북조선에서 혁명은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

정치기관을 수립하지 말 것, ②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과 조직을 결집한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라는 항목은 북한정권의 수립 및 당의 창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였다. 『동아일보』 1993년 2월 26일;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М., 1981, p.39.

6)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 1996), 149~153쪽.

7)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55쪽.

러한 혁명성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사회건설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로의 지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치중해 있었다.⁸⁾

이러한 일반정책에 고려해 볼 때, 소련군정은 북한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반제·반봉건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닦는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교육의 목적이거나 정책으로 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된 직후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또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따라’ 등의 사회주의 교육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다. 소련군정 교육담당자는 북한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일제 교육의 식민적·봉건적 특성에서 찾았다. “한국에서의 교육제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양사업에 있어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인민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민교육 재조직에 관한 임시인민위원회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⁹⁾ 그러므로 소련군정은 반제·반봉건 차원에서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을 전면에서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초등 무료의무교육제와 각종 학교의 국가영영화라는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반드시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혁될 것을 전제함으로써 사회주의 방향으로의 교육개혁을 암암리에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 교육개혁의 핵심은 바로 일제교육의 청산과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경험을 보급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소련정책의 방향은 실

8)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7), 344쪽.

9) АВГРФ, ф.0480, оп.2, п.1, л.2, л.62.

제 실행과정에서 개혁을 주도할 북한인 전문인력의 부재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고, 이 문제는 북한의 교육개혁에 있어 소련의 지원이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해방 직후 교육의 정상화를 향한 실제 교육현황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였다. 1946년 2월 임시인위가 성립될 즈음에 소련 민정국은 해방 직후부터 1946년 초까지의 북한교육 현황을 총괄하면서 당면 교육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절대적으로 부족한 각도 교육부 직원(3명) 및 교육부 지도자의 부재는 인민교육 노선에 따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 ② 교육국 직원(18명)들은 상호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아 자신들의 과제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국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 ③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편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가 없다. 소련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집하는데 있어 지방 당국에 도움을 줄 전문 통역요원이 없다. 종이와 최소한의 교육용품이 없다.
- ④ 교과서 발행을 위한 예산이 없다. 학교 예산문제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소위 말해서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봉급의 균등화가 지배적이다.
- ⑤ 한국어판 서적 출판, 영화, 연극공연, 음악, 가요 제작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¹⁰⁾

위와 같이 교육문제를 인식하면서 소련민정국 교육담당자는 향후 북한 임시인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제도, 조직, 내용에 걸쳐 근본적으로 인민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소련정부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¹¹⁾ 즉 소련정부는 북한의 교육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10) АВГРФ, ф.0480, оп.2, п.1, д.2, лл.68~69.

11) АВГРФ, ф.0480, оп.2, п.1, д.2, л.69.

①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을 위한 고문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각종 교육기관용 소련 교육과정과 교과서 일체를 비롯한 세트일지라도 우리에게 공급해야 한다.

② 또한 일본에서 납품되고 있는 펜, 연필, 제도용구 등의 학용품을 북한으로 수출해야 한다.

③ 러시아의 문학·정치서적, 아동서적, 예술서적, 과학도서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야 한다. 인쇄시설의 바탕 위에, 자격을 갖춘 통역 참모요원으로 리-한출판을 추진해야 한다.

④ 소련의 극장 공연물, 가요와 음악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보급해야 한다.

⑤ 러시아 영화상에 한국어 자막 및 한국영화를 만들기 위해 영화관 설립이 필요하다.

⑥ 학교에서 노어를 제1외국어 과목으로 강의하고 성인들에게 러시아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어 교습을 위한 학교와 강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전문가를 요청해야 한다.

⑦ 한국인의 노어학습용 교과서, 리-한사전, 한-러사전 및 한국인을 위한 자습서 등을 발행해야 한다.¹²⁾

교육개편을 추진할 교육행정기구와 관련하여 “교육국 및 교육과의 직원을 증원하고 각도 군대표부 내에 교육부를 운영할 것”¹³⁾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련군정의 교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첫째로 교육이념이나 바람직한 인간상의 설정과 관련하여, 소련군정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적 품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련군정은 북한의 학교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인간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인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12) АВТРФ, Ф.0480, оп.2, п.1, д.2, лл.69~70.

13) АВТРФ, Ф.0480, оп.2, п.1, д.2, л.70.

고 있다.

“새 북한의 학교는 일정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특성을 보유한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직, 노동애호, 인민에 대한 사랑, 전 세계 노동대중에 대한 사랑,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킨 소련인민에 대한 사랑,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에 대한 증오 등 최상의 특성을 지닌 인간교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¹⁴⁾

개인이 육성해야 할 품성으로 노동애호, 인민 및 전 세계 노동대중에 대한 사랑, 소련인민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의 적에 대한 증오 등을 함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적 인간 특성은 1945년 12월에 5도행정국이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요강”에서 교육이념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수사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교양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학교에 교양부문에 관한 교장 자문직이 설치되었으며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 업무와 병행하여 교양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행동 규칙’에 기초한 엄격하고 자각적인 규율을 제시하여 실천토록 하였다.”¹⁵⁾

둘째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각 분야의 소련 교육전문가 특히 소련계 한인 교육자 및 소련학자들의 파견을 들 수 있다. 소련은 북한주둔 소련군

14) АВГ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39.

15) АВГ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39; 소련은 1943년 8월에 ‘학생규칙’을 채택하였다. ‘학생규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교육으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기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학생규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규율을 준수하는 도덕적 교양의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무척 중시되었다. 북한 또한 소련을 모방하여 학교사업에 있어 학생들의 교양사업으로 ‘학생규칙’이 중요시되다가 1949년에 교육상의 지시로 ‘학생규칙’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학교 내는 물론 과외생활 규칙으로 제시되었다. “정확한 품행 사정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12호 (1954. 12), 5쪽.

사령부 내에 소련민정국이란 민사행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교육과 관련하여 소련 교육고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육개편 업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요청에 의해 소련 교육전문가들이 북한으로 파견되어 왔는데 특히 소련계 한인의 교육국 및 각급 학교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¹⁶⁾ 1948년이 되면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체계화 및 교양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1950년 8월까지 약 30명의 소련학자의 북한 파견근무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노어를 보급하기 위해 노어 교사의 파견도 빼놓을 수 없다.¹⁷⁾

셋째로 북한의 교육전문 인력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적극 지원하였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사업에 있어 소련군정의 역할과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사상에 익숙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소련의 지원방침은 소련유학생 및 교원시찰단의 파견이다. “소련정부의 협조 하에 1946년에 329명을 소련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도록 파견하였다.”¹⁸⁾ 329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46년에 소련의 각 대학에 파견된 제1기 소련유학생 299명과 소련의 교육제도와 선진적 교육이론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1946년 말에 파견된 교원시찰단 30명을 합한 숫자이다.¹⁹⁾ 1947년에는 제2기 소련유학생으로 학부생 120명과 대학원생 20명을 파견하였다.²⁰⁾ 이렇게 1946년부터 파견하기 시작한 소련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1950년에는 약 600여명에 달했다.²¹⁾ 194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원 재교육을 위해 소련으로 교원시찰단이 파

16) 1947년에 작성된 문건에 의하면 “인민교육 관련 6명의 소련전문가들이 북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을 도와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AVPRΦ, Φ.0480, оп.3, п.4, д.11, л.148.

17) AVPRΦ, Φ.0480, оп.4, п.14, д.46, л.42; 김일성종합대학 편,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발행, 1956), 59~63쪽.

18) AVPRΦ, Φ.0480, оп.3, п.4, д.11, л.148.

19) 남일, “공화국 교육발전에 준 소련의 거대한 원조”, 『민주청년』 제63호(1950. 3. 16).

20) AVPRΦ, Φ.0102, оп.3, п.7, д.27, л.31, лл.39~40.

21) 『Новая Корея(새조선)』, 제1호(1950), 49쪽.

전되었다. 구체적으로 “1947년에 북한의 교수 30명이 모스크바로 가서 6개월의 재교육 강습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교육국의 전 장관을 비롯해 교육국 및 도교육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적 근무자들은 인민교육 조직을 시찰하기 위해 소련을 견학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실천적 교육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²²⁾고 언급되어 있다.

넷째로 소련정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소련의 교육과정, 교수요강 및 교과서 등을 발송하였다. 또한 소련 국가 및 사상 문화를 북한에 소개할 목적으로 소련의 각종 서적과 러시아어를 보급하고 영화, 연극 등을 북한에서 상영하도록 적극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소련의 사상과 문화를 북한에 소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제공된 각종 교육 및 문화 관련 자료들은 소련국가의 전 세계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소대의문화연락협회에서 주로 맡아 북한으로 발송하였다.²³⁾

2. 북한의 학교교육 정책

북한에 중앙행정기구가 조직되기 전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거나 천명했던 교육정강은 말할 것도 없이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과 ‘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집약되었다. 교육의 필수적 과제로 의무교육제라는 단일 정강이 제시되었지만 중앙행정기구가 설치되고 당조직이 정비되면서 교육정강도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1945년 11월 17일에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 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새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에서, ‘새로운 인민적·민

22) АВПРФ, Ф.0480, оп.3, п.4, д.11, л.148; АВП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42.

23)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205~210쪽을 참고할 것.

주주의적 교육제도' 수립의 방향으로 철저히 개혁하고 청소년들의 머리 속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즉 공산당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써 새로운 교육제도의 수립과 일제의 사상잔재 일소를 표방하였다.²⁵⁾ 북한의 교육정책은 중앙행정기구의 설치를 계기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인민위원회대표 확대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2월 9일에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의 원칙을 담은 "11개조 당면과업"을 발표하였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조항을 살펴보면, 당면과업으로 "8. 민주주의적 개혁에 적응토록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하며 초등·중등학교를 확장하며 교원양성을 재준비하며 국문 교과서를 편성할 것, 9.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교육의 노예화 사상을 청소하기 위하여 진실한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인민을 교양하며 각계 각층 인민에게 문화계몽사업을 광범히 전개할 것"²⁶⁾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11개조 당면과업을 확대하고 정교화하여 1946년 3월 23일에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정강에는 해방 직후부터 강조해 왔던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의 실시'와 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①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제16조)

24)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9~20쪽.

25) 김종철,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연구소 편,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100쪽.

26)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 38쪽.

② 민족 문화, 과학 및 기술을 전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및 영화관의 수효를 확대시킬 것.(제17조)

③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제 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를 광범히 설치할 것.(제18조)

④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보조를 줄 것.(제19조)²⁷⁾

교육정강에는 ‘민주주의적 개혁’, ‘민주주의적 제도’, ‘민주주의적 정신’에 기초하여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인민의무교육제도의 실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확장, 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의 준비, 교과서 개편, 기술교육의 진흥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정치교양교육을 실시하되, 학생, 교원은 물론 일반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은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소련이 학교교육 정책으로 초기부터 제안해 온 사립학교를 국가가 운영하고 감독하는 학교의 국가경영화를 북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전 학교를 국가경영화하는 조치는 명백히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방침으로서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를 향후 교육정책으로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학교교육 정책은 이미 1945년 11월 21일에 발표되었다. 교육국은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북조선 학교교육 임시조치요강”을 발표하였다. 요강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교육이념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즉 ‘학교사업 조직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한 북조선 교육이념’을 제시

27) 『김일성 선집』 제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55쪽.

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갖는 중요성은 최초의 발표이면서, 이후 북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에 버금가는 교육이념이 발표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 조치가 임시적이라고 하였지만 해방 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임시적이지 않다. 이런 점을 주지하면서 북한 교육이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적 교육 원칙에 입각하여 조선인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국어, 역사 교육에 치중하면서 반제 교육에 주력할 것과 소련에 관한 지식을 풍부화시키는 동시에 과학적 세계관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며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교육만은 특정학교에 한할 것이다.”²⁸⁾

학교사업의 기본 방향과 원칙으로서 ‘조선인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교육’, ‘국어, 역사 교육에 치중’이라는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방향과 더불어 ‘반제 교육’, ‘소련에 대한 지식의 풍부화’, ‘과학적 세계관의 배양’이라는 사회주의적 교양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 이념이 식민교육 청산과 사회주의적 교양이라는 두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 이념에 기초한 구체적인 학교교육 방침은 1947년 10월에 발표되었다. 교육국은 통일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혼돈상태에 있는 학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1947년 10월에 “각급학교 규정안”을 발표했다. 정식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실시되도록 하였다. 1947년의 규정안은 북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였으며, 1950년 3월에 와서야 교육성은 “각급학교 규정”을 새로 발표하였다.²⁹⁾ 새 규정안은 “이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평양, 1955), 15쪽.

29) 송진파, “새로 제정된 각급학교 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3호(1950), 48~57쪽. 각급학교 규정이란 인민학교, 초급 중학교, 초급 기술학교, 고급 중학교, 기술

미 발표된 규정안을 기초로 하여 더욱 선진적인 교육이론과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을 참작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1947년 10월의 “각급학교 규정안”을 기초로 새 규정안으로 정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47년 작성문건을 직접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50년에 작성된 “각급학교 규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방 후부터 1950년 초까지의 구체적인 학교교육 방침을 이해하고자 한다. 학교교육 방침은 제1장 제2조의 각급 학교의 목적과 제3조의 학교교육 교양사업의 원칙에 압축되어 있다. 인민학교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인민학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민학교는 인민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교육교양사업을 실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능을 습득 숙련케 함으로써 부강한 민주 조국 건설에 각방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³⁰⁾

“학교의 목적이 각각 그 학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근본 원칙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인민학교 목적은 학교교육의 기본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목적으로 명시된 ‘인민적 민주주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련군정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교육정책이 실시될 것을 명시한 데 비해, 북한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띤 ‘인민적’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문학교에 대한 각각의 규정을 의미한다. 각급학교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4장 학교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 자산 및 경리에 관한 규정, 제6장 학교 내 단체에 관한 규정 등의 체계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30) 위의 글, 50쪽.

러나 ‘진보적’이건 ‘인민적’이건 간에 실질적인 용어의 내용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각급학교의 교육 교양의 원칙을 살펴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각급학교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육 교양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일제 및 봉건적 잔재의 숙청, 정치교양, 국제주의 사상의 배양, 과학적 세계관의 확립, 로력 교양, 민족 문화의 발전, 육체 교양, 미적 교양, 전면적 교양, 가정과 사회와의 연결 등.”³¹⁾

북한의 학교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위의 ‘교육 교양’의 원칙에 기초할 것을 제시하였다. 1945년 11월에 임시조치요강이 발표된 후에 학교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관한 실증자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군 기관지인 『조선신문』에 의하면, 교육국이 중앙 차원에서 학교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1946년 2, 3월 경의 학교사업 및 교수안의 편성 원칙에 대해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사업의 원칙이 위에서 제시된 “각급학교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산 인민학교 이윤서 교장의 발언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의 전반 교수를 조선어로 교수”하였으며 “조선에서 일본 통치 잔재를 숙청할 목적으로 교수안을 재편성”하였다. “조선역사, 국어, 리과, 기타 모든 과정의 새 교수안에는 선진 민주주의 원칙에서 가장 민주주의 이론, 자유, 애호인민, 소련 인민과의 친선의 원칙에서 아동들을 교양하기 위하여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²⁾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의 학교교육 정책은 ‘일제 교육유산의 청산’과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의 함양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일제 교육유산의 청산

31) 위의 글, 50쪽.

32) “조선학교에서”, 『조선신문』 제14호 (1946. 3. 24).

이라는 전자의 정책은 모든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제’의 수립과 국가주도에 의한 사회주의적 학교교육 체제의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후자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함양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에 기초해서 학생과 교원들을 교양하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민족간부의 육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학교교육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행정적 차원에서 교육국을 정비하여 교육개혁 정책을 계속 발표함과 동시에 지도급 교육행정가와 일반교원들에 대한 재교육 및 교원직업동맹의 결성을 통해 개혁안의 실행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학생들을 학교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대중들의 교육열을 조직하여 대대적인 학교 건설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와 동원을 유도하였다.

III. 교육정책 담당자와 교육개혁의 추진

해방 후 교육의 과제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교육의 기틀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명확한 청사진은 없었지만 우선적으로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교육정책과 이러한 목적을 철저히 반영하였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개편, 식민지 교육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으로 수행하였던 교사들의 재교육, 식민지 정책의 순응적 인간을 양성하였던 강압적·주입적 교육방법의 개선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념적 준거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해방 당시 국내에서는 교육개혁의 틀을 제시할 만한 준비활동이 없었으며 그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식인 집단도 없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일제 식민통치기간 교육활동을 했던 교육자나 학자들 대부분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군의 북한 점령으로 민족주의자보다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학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육분야의 활동보다는 정치·경제적 활동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의 교육을 위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처럼 북한 내에 새로운 교육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군은 통치의 기본방향으로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과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반제·반일·반봉건적이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향한, 즉 사회주의 지향적 교육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 아래서 교육개혁을 수행할 교육인사들이 선별되었다.

해방 직후인 8월 16일에 평안남도 평양에서는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교육부장에는 민족주의자인 홍기주가 임명되었으며 교육부는 각 학교와 연락해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하였다.³³⁾ 그러나 8월 26일에 소련군의 평양 진주와 동시에 건준은 좌우합작 형태의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재편되었으며 교육국장에는 장종식이 임명되었다.³⁴⁾ 장종식은 소학교 교원을 역임했고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에 가담하다 일제에 검거되어 감옥생활을 한 공산주의자로서,³⁵⁾ 결국 해방 직후부터 1947

33) 한근조, 『고당 조만식』 (서울: 태극출판사, 1974), 375쪽; 오영진, 『소군정 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서울: 국토통일원, 1983), 24~25쪽.

34) 오영진, 위의 책, 75쪽.

35) 소련 문헌에 장종식의 경력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1905년 제주도 농가 출생. 중학교 졸업. 1945년부터 공산당원. 1931~34년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해 투옥됨. 이후 혁명활동 중단.” РИХИИИ, №.17, оп.128, д.61, л.57; АВПФ, №.0102, оп.6, п.3, л.13, л.46; 북한 정간물 『정로』에서는 “1906년 제주도 읍내 중농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경성에서 중학을 마친 후 소학교 교원생활을 4년 동안 하였다. 그후 1923년으로부터 1926년에 이르

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성립되기 전까지 그가 초창기 교육사업을 전담했다고 할 수 있다.

소련군정은 교육사업을 비롯한 민간업무를 각 지방인민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위원회를 지도·지원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소련군사령부는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민정기구를 설치하였다. 1945년 9월경 25군사령관 치스짜코프는 이 기구의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에게 보고하였고, 10월 3일 25군사령부 산하에 소련 민정기관이 탄생하였다. 11월 말에는 약 50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기관을 지휘하는 민정담당 부사령관 직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³⁶⁾ 민정기관은 로마네키를 민정담당 부사령관으로 하여 행정정치부, 산업부, 재정부, 상업조달부, 농림부, 통신부, 교통부, 보건부, 교육문화부, 사법검찰부, 보안검열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문화부는 막심츠크 소좌가 담당했다.³⁷⁾

는 4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각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27년 검거되어 대구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재감 중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목포형무소에서 대구감옥으로 또 다시 대전감옥으로 전전하는 영어의 생활을 보냈다. 1933년 출옥하자 병으로 눕게되어 향리에서 1936년까지 정양하였다. 1937년 내양(來壤)하여 조직활동을 맹렬히 전개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현재 북조선교육국장의 중임을 맡고 있다.” 『정로』 1946. 2. 17; 장종식은 평남인민정치위원회 교육국장에서 출발하여 5도행정10국의 교육국장(1945. 11~1946. 2), 북조선 교육문화후원회 회장(1946. 2~),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장(1946. 3~1947. 1)을 역임했다.

36) АВПРФ, ф.0480, оп.4, п.14, л.46, л.7.

37) 기광서의 연구에 의하면, 1945년 10월 3일에 신설된 민정기관이 1947년 5월에 주북한 소련민정국으로 확대·개편되었는데, 이전 민정기관 내에서도 ‘교육문화부’가 존속했는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 분석”, 138쪽;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이었던 박익의 증언(1997. 1. 22.)에 의하면, 자신이 북한에서 종합대학 사업에 전념하던 1946년 말에 막심츠크 소좌는 당시 교육국 교문 겸 종합대학 교문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교육문화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1947년 5월 소련민정국으로 개편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의 행정, 경제 기구의 규모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민정기관의 조직 규모와 체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정기관은 1947년 5월 주북한 소련민정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몇몇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책임자들도 일부 바뀌었다. 민정국의 조직 규모는 총 13개 부서에 요원수 74~80명 가량으로 확대·보강되었다. 우선 민정국의 장으로는 1947년 가을에 로마넨코를 대신하여 레베제프 소장이 임명되었다. 교육문화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변함없이 막심츠크 소좌를 책임자로 하고 중고등 부문 선임교관은 고를로프 대위가, 초등교육부문 교관은 크나제프 대위가 담당했다.³⁸⁾

소련 민정기관의 교육담당 소련고문과 함께 북한 교육체제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은 바로 소련계 한인 교육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북한에 파견된 소련계 한인의 숫자가 총 몇 명이었는가를 정확히 제시하기가 어렵다. 194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만 이미 128명의 소련계 한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북한으로 파견되었다.³⁹⁾ 란코프에 의하면, 1940년대 말까지 약 300~500명의 소련계 한인들이 활동하였던 것 같으며, 북한 전 문화성 부상이었던 정상진의 증언에 의하면 약 427명의 소련계 한인이 있었는데 그 중 1945~46년까지 북한에 대략 200명이 들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⁰⁾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소련계 한인들은 새로 형성되는 수많은 북한의 당·정·교육기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3월에 김일성이 소련 민정담당 부사령관인 로마넨코를 통해서 소련정부에 “북한에 소련계 한인

38) АВП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л.9~10. 기광서, 위의 글, 137~138쪽에서 재인용; 교육 문화부장 막심츠크는 25군 정치부 간부 출신으로, 박일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방에서 교원을 했었다고 한다.

39) РЦХИДНИ, ф.17, оп.128, д.55, л.5.

40) А. Н. Ланьков(아. 엔. 란코프),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북한: 어제와 오늘)』 (Москва, 1995), 165~166쪽.

<표 1> 소련군정기 주요 직책 재임자

행정조직	주북소련군사령관	소련민정국	민정국교육담당자	교육국책임자
소련민정국의 설치(45.10. 3.)	치스차코프 소장	장관: 로마넨코 소장	교육문화부장: 막심츠크 소좌	교육국장: 장종식
5도 10국 행정 (45. 11.19)		행정정치부: 이그나찌예프 대좌	중고등부문 장관: 고를로프 대좌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 (1946. 2)			초등교육부문 장관: 피나제프 대위	교육국장: 장종식 교육국 차장: 권직주
북조선인민 위원회 (1947. 2)	코로트코프 중장 (1947. 4.)	장관: 레베제프 소장 정치담당부국장: 이그나찌예프 대좌		교육국장: 한설야 교육국 차장: 남일

을 파견해 줄 것”⁴¹⁾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당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단순히 교육만 받은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련계 한인 다수가 곧바로 북한의 당·정·교육기관으로 전직하여 핵심업무를 맡았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소련계 한인들을 활용하였다. 북한에 파견된 소련계 한인의 다수가 중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⁴²⁾ 그러므로 소련계 한인들 대다수가 첫 해에 교육분야와 북한제도 형성을 위한 당·정 간부양성

41) ПУХИЗИИ, №17, on.128, д.205, л.5.

42) 소련계 한인의 다수가 교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연결된다. 첫째로 1940년 당시 소련에서 교원들은 하층지식인을 대표하여 이념적으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겨졌으며, 각 지방에서 당정책의 적극적인 전파자로 간주되었다. 둘째로 1930년대 말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은 교원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는 거의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소련계 한인들 대다수가 교원이었다. 위의 책, 166~167쪽.

소에 종사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했던 소련계 한인 중 교육분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1946년 10월 말에 북한에 들어 온 '36그룹'이다. 그룹의 일원인 남일은 도착 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교육국 부상에, 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에, 박병용은 강동정치학교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⁴³⁾ 남일은 소련에서 알마아타공화국 사마르칸트 소재 사범대학의 물리수학부 학장을 역임하다가 1946년 10월 말에 북한 도착과 동시에 교육국에서 활동하다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교육국 부상으로 발탁되었다.⁴⁴⁾ 1947년부터 1948년 북한정부 수립까지 한설야가 교육상을 담당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새 교육상에 백남운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남일

43) ПУХИЗНІ, ф.17, оп.128, л.1119, л.62. 이 문서에 의하면, "1946년 10월에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인 슈티코프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36명의 소련계 한인 집단을 북한으로 파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47년 2월 19일에 김일성이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에서 소련이 북한의 교육분야에 제공한 원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소련으로부터 초빙한 기술자 36명은 각급학교 사업 및 교과서 편찬에 막대한 방조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이 지칭하고 있는 교육 및 문화부문의 기술자 36명이란 시기적으로나 파견한 숫자로 미루어 볼 때 소련계 한인 '36그룹'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상호의 증언(1996. 11. 14)에 의하면 '36집단'이라는 명칭은 3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불리었다고 한다.

44) 남일은 한국전쟁 시기에 군총참모장을 역임했으며 전쟁이 종결될 즈음에 판문점 정전위원회 수석위원으로 파견되어 유엔 측과의 정전협정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내각 부수상을 거쳐 외무상까지 역임했다. 북한연구소편, 『북한인명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1), 202쪽; 남일은 말년에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군용트럭에 치어서 죽었다. 현재 러시아 등에 살고 있는 소련계 한인 망명자들은 남일이 살해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사실상 남일의 죽음에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첫째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남한의 분석가들이 제기한 의문에 의하면, 우선 공식적으로 1976년 3월 7일 남일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그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직책상 그가 당연히 나타났어야 할 행사에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일의 장례식에 당시 북한 서열 1위와 2위였던 김일성과 김일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일이 직급에 어울리는 대성산이 아니라 급수가 떨어지는 다른 묘지에 매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164 ~ 165쪽.

의 교육부상직은 1947년 2월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시기인 1950년 여름까지 지속되었다.

북한 교육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에 교육국의 부상을 역임했던 남일의 위치는 당시 교육국장인 한설야의 경력과 활동을 검토해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설야⁴⁵⁾는 일제시대부터 문학 분야에 종사했으며 해방 직후 '합흥문화협회' 위원장에, 1946년에는 북조선예술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북한의 문화예술사업에 전념했던 인물이다. 그는 잠시 중학교 교원생활을 했었지만 실제적인 교육경력이 미천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국의 실제업무는 소련군정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남일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정과 북한지도부는 학교교육의 개편 작업과 더불어 고등교육 사업으로 대학의 신설과 확장, 특히 그 중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의 설치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다. 종합대학은 장차 신설될 타 대학의 모체로서 각 분야의 사회주의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민족간부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종합대학을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책임자의 선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초창기 종합대학의 창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주도했던 북한인사는 1946년 9월과 10월에 이 대학 부총장으로 활동했던 연안과 한빈이었으나 곧 1946년 10월 말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36집단'의 일원인 박일에게 부총장의 직위를 넘겨주었다. 박일은 알마아타 공화국의 카자흐스탄 종합대학에서 '철학사'를 강의하다 북한에 파견되어 대학 부총장을 역임했으나 소련군정과의 갈등으로 1948년 3월에 소련으로 소환되었다.⁴⁶⁾

45) 1900년 합흥 농가 출생. 1922~23년 일본대학 문과 졸업. 1923~25년 북한에서 중학교 교원. 1925~31년 소설 비평 저술. 1931~32년 잡지사 기자. 1934~35년 조선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 사건으로 투옥. 1935~43년 작품 비평 저술. 1943. 7~1944. 5 재차 투옥. 1945년 9월 '합흥문화협회' 위원장. 1945년 조선공산당 입당. 1945년 월북. 북조선예술총연맹 위원장(1946. 7),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장(1947. 3~1948. 8). АВРРФ, ф.0102, оп.6, п.3, л.13, л.45; 북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 609쪽.

46) 박일의 증언(97년 1월 22일, 2월 15일); 1941년 레닌그라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알

종합대학의 초대 총장은 김두봉이었으나, 그는 1946년에 임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직과 북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1947년 3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학의 명목상 총장 및 최고의 지위는 김두봉이 맡았으나 그는 당·정 사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에서 대학사업 경험과 교수경력을 구비했던 박일이 종합대학의 실질적인 부총장으로서 대학의 조직안, 각 학부와 학과의 편제, 교수의 임용 등 전반적인 대학행정사업을 주관했다.

소련군정 기간에 교육국과 학교교육 기관은 물론 당·정 교육기관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소련계 한인들은 <표 2>와 같다.

소련군정기에 북한의 국가건설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떠한 분야로 파견되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아직 산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 파견된 소련전문가에 대한 기록이 여러 보고서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렵다. “1947년 11월 2일에 비류조프에 의해 48명의 소련인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는 새로운 안건이 제시되었다. 슈티코프의 지령에 의하여 ‘북한교육을 위한 8명의 전문가 및 조직가들’을 북한으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⁴⁷⁾ 또한 1947년에 작성된 문건에 의하면 “인민교육 관련 6명의 소련전문가들이 북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을 도와주었다”⁴⁸⁾고 기술하고 있다.

미야타공화국의 카자흐스탄 종합대학에서 ‘철학사’를 강의함. 자신의 소련 소환에 대한 박일의 증언은, “소련사령부는 김일성대학을 소련식으로 설립하기를 요청”했고, 박일 자신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종합대학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초기부터 소련군정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 후에 소련군정은 박일이 소련군정 측과 김두봉과의 관계에 있어 소련 측이기보다는 김두봉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소련중앙당의 소련계 한인 검열 사업에서 박일을 ‘민족주의자’로 보고했기 때문에 소환되었다고 한다.

47) АВГРФ, ф.06, оп.9, п.59, д.889, л.3.

48) АВГРФ, ф.0480, оп.3, п.4, д.11, л.148.

<표 2> 북한의 교육계 및 당·정 교육기관에서 활동한 소련계 한인들

강상호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원, 중앙당학교 교장, 내각 부수상
김용성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택영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남일	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 교육성 부상
명월봉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병물 ⁴⁹⁾	강동정치학원 교장, 내무성 후방국장
박영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함경남도 도당위원회 의장
박영빈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무주임,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박일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오완목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유성훈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이동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이춘백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원
장주익	중앙당학교 교장
정률	김일성종합대학 주임교수, 문예총 부위원장, 문화선전성 부상
태성수	『정로』 주필, 조선노동당 내 교육담당,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문화선전성
허익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중앙당학교 교장.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로 주요 교육정책 담당자가 임명되었으며 본격적인 북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련계 한인 교육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지원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소련계 한인 교육전문가들은 소련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교육행정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북한 교육체제의 형성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세력이 되었다. 특히 학교교육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소련의 교육경험과 학교교육 체제를 북한교육에 접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9) 전직 교원으로서 1947년에 북한에 파견됨. 1947년 9월 평양 아래에 있는 강동에 '강동정치학원'을 창설하여 남한에서의 비합법적인 활동을 할 요원들을 양성하였다.

IV. 학교교육개혁의 내용과 특징

1. 교양사업의 강화

1945년 말에 학교교육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교육개혁 법령은 1946년 초에 발표되기 시작했다.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고 토지개혁을 시발로 한 ‘민주개혁’에 발맞추어 3월 말에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학교교육개혁 법령은 소련군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었는데, 북한에서 단행된 교육개혁의 목적은 교육국장 장종식의 글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즉 “북조선에 있어서 인민교육개혁의 근본목적은 전 교육체계에서 일본적 사상을 완전히 근절하고, 학교를 우리 조선인민의 각층이 수학하기에 용이하도록 실제적으로 편성하며, 학생을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교양하여 조선의 인민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입니다.”⁵⁰⁾

교육개혁의 근본 목적이 일제잔재의 청산, 인민의무교육제의 실시, 민주주의 정신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양교육의 실시, 민족간부의 양성으로 압축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제잔재의 청산은 교육제도의 개편과 식민사상의 청산이라는 두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식민사상의 청산은 사상교육과 교양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는 식민사상을 청산하고 교원과 학생들을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개혁의 목적을 정치사상 교육 또는 당시 용어로, 정치훈련 및 교양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중앙행정기구인 임시인위의 첫 학교 교육 법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3월 25일에 결정 제11호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을 보면

50) 장종식, “북조선 교육의 당면과제”, 『인민』 제1권 제1호 (1946. 11), 23쪽.

교원과 학생들에게 정치교양사업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학내의 정치교양사업은 물론 교원 재교육 사업은 각 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 교장들의 주요한 과제였다. 결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항에 각 교육기관과 학교 교장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ㄷ. 생도에게 진보적 민주주의 원리에 의한 철저한 정치훈련 및 교양사업을 전개할 것. 그의 실시방법에 있어서 생도들에게 회의·담화·토론·정치적 보도에 관한 회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정세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제반사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인식시킬 것”⁵¹⁾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5항에서 교육국과 도교육부가 수행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ㄱ) 교원직업동맹과 협력하여 진보적·민주주의적 원리에 의한 교원간의 정치훈련 및 교양사업을 전개할 것, ㄴ) 여류방학 동안 교원 재교육 및 실력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기 소속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그 실시결과를 교육국에 보고할 것”⁵²⁾이라고 명시하였다. 교원의 정치교양교육을 위한 재교육 사업이 인민위원회와 교육국의 공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치교양 및 재교육 사업의 선행 조치로서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 교육기관에서 북한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교육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을 숙청하지 않고서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없으며 나아가 민주교육을 성취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학교 내의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평양시와 매 지방마다 당·정 기관, 사회단체 대표들로 교육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교육심사위원회는 교원 내의 반동분자들과 이색불순분자들을 적발할 목적으로 각급학교 교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⁵³⁾ 이러한 결과, “교원심사사업과 각성

51) “학교사업 개선책에 대한 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657쪽.

52) 위의 문서, 658쪽.

53) 김창호, 『조선교육사 3』 (1926~1953. 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23쪽; 『김일성

된 청년학생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교육기관에 숨어 준동해 온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자본가 출신의 반동분자들과 그에 적극 추종한 불순이색 분자들이 철저히 적발, 제거되었다”⁵⁴⁾고 평가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대로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친일파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 체제에 반대하는 민족인사와 지주, 자본가 출신들이 숙청되었다.

이와 같이 ‘반동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숙청 작업과 병행해서 교원 재교육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946년 3월 6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4차 회의의 “교육부문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일제잔재의 청산을 교육부문의 첫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⁵⁵⁾ 교원 재교육은 학교의 재조직과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 전제였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 사범교육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시키고자 하는 이 테올로기적 목적에서 교원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원 재교육의 필요성은 전 교원을 교육수준, 근무연한, 소속당, 사회계층별로 통계를 산출한 분석표를 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교원 분석표에 의하면 인민학교 교원의 70%가 정식 사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중 인민학교 교원의 50%인 8,345명이 중등교육기관만 졸업하였으며, 심지어 20%인 3,306명의 인민학교 교원은 최저 지식 수준인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경력에 있어서 인민학교 교원의 41%가 1년 미만, 나머지 59%의 교원이 2년 이상, 다시 말하자면 일제 교직경력 교원이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일반 교육수준이 초등교원에 비하

선집』 제1권, 1954, 101쪽. 1946년 4월 10일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 제6차 확대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 및 반동학생들을 통해 색출할 목적으로 교원들을 심사 재교양할 것이며, 민청소속 청년들을 각 학교 혼용 주임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54) 『정료』 1946. 6. 1; 김창호, 위의 책, 123~124쪽에서 재인용.

55)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서울: 한백사, 1990), 134쪽.

<표 3> 북한의 교원 분석표(1946. 6. 1. 현재)⁵⁶⁾

	초등학교 총교원수	백분율(%)	중등학교 총교원수	백분율(%)	
	16,599	100	1,849	100	
교육 수준에 따라					
초등	3,306	20	20	1	
중등	8,345	50	176	9	
중등사범	4,439	27	165	9	
사범전문	306	18	251	14	
고등	203	12	1,237	67	
근무연한에 따라					
1년	6,931	41	687	37	
2~3년	3,946	24	474	26	
4~5년	2,357	14	247	13	
6~7년	1,605	10	226	12	
10년 이상	1,760	11	215	12	
소속당에 따라					
공산당	310	2	69	3.6	
기타당	761	4.6	110	6	
민청	4,807	29	323	17.4	
교원동맹	10,721	64.4	1,347	73	
사회 계층에 따라(조선국적)					
노동자	539	3	34	2	
지식인	2,534	15	326	18	
농민	3,294	20	269	14	
	빈농				
	중농	5,844	35	554	30
	부농	775	5	123	7
상인	지주	702	5	177	9
	소상인	1,785	11	188	10
	대상인	258	1.5	59	3
자본가	251	1.5	33	2	
사무원	629	3	86	5	

56) АВТРФ, №0480, оп.2, д.7, лл.164~165.

여 훨씬 낮지만 근무경력은 마찬가지로 매우 짧다. 중등학교 교원 중 정식 사범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이 10%이고, 1년 미만의 근무경력자가 37%이며 2년 이상의 일제 교직경력자가 63%나 되었다.⁵⁷⁾ 이렇게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지닌 신입교원들 대다수가 단기교원양성소를 졸업하였거나, 타기관에서 인입된 교육경험이 부족한 교원들이었다. 이들에게 교육학이나 심리학 강의 등을 통해 일반 교육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하고 각 과목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숙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계층 및 소속정당별 교원 구성을 분석해 보면, 임시인위의 성립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원인 교원은 드물었지만 대다수 교원이 민청이나 교원직업동맹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계층에 따른 교원구성을 보면 초등학교 교원 중 노동자 출신 3%, 빈농 출신은 20%였으며, 중등학교 교원 중 노동자 출신은 2%, 빈농 출신은 14%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절대다수의 교원이 일제 교직경력과 사범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교육 경험의 청산이 시급하였으며, 다수의 교원이 민청이나 교원직업동맹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및 빈농 출신 교원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노동자·농민 출신 교원의 양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의 정치사상 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북한 통치체제 및 그 교육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실천할 교원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교원 재교육을 통해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는 우선 교원들을 중앙 차원에서 결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정권 및 노동당을 중심으로 전 교원들을 결집시키고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교원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46년 4월 5일에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이 결성되었다.⁵⁸⁾ 교원동맹의 결성 목적은 정치교양

57) АВПРФ, ф.0480, оп.2, д.7, л.149, лл.164~165.

사업을 강화하여 교원들을 한층 더 북한정권 및 당의 주위로 결속시키고 실천적으로는 학교의 개혁 작업에 열성적으로 나서도록 추동하는 것이었다. 교원동맹의 조직 결성은 급속히 마무리되었다. “교원들의 단합된 정치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1946년 3월 말에 결성된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은 1946년 전반기에 벌써 총 20,297명에 이르는 거의 모든 교원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군 지부 및 중앙위원회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교원조직의 조직적 결성은 1946년 5월에 끝났다.”⁵⁹⁾ 인민교원직업동맹은 계속 확장되어 1948년 말에는 37,900명의 교원을 결집하였다.⁶⁰⁾

이제 조직적인 동원을 통한 실제 교원 재교육 활동의 조직과 실천만 남았다. 1946년 3월과 4월에 각 지방마다 교원의 정치사상 교양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자 대회와 강습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이후 본격적인 교원 재교육 활동에 들어갔다. 해방 후 실시된 교원 재교육의 목적과 그 성과에 대해 소련군정요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구교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데올로기로 교양되었으며 구교원들의 약 반수가 부르조아 지주계층 출신이므로, 구교원들을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대대적인 교양사업을 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겨울과 특히 봄방학 동안에 각 도에서 재교육을 위한 5일에서 7일간의 교원단기강습회를 조직하여 인민학교 교원 14,410명과 중등학교 교원 1,613명을 재교육시켰다.”⁶¹⁾

1946년 5월 현재 인민학교의 총교원 16,599명 중에서 14,410명이 재교육되었고, 중등학교의 총교원 1,849명 중에서 1,613명이 재교육되었다는 것은

58) 『정료』, 1946년 4월 10일, 제75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이하 GARФ로 약칭), ф.5283, оп.18, д.208, л.32 자료에 포함됨.

59) АВРФ, ф.0480, оп.2, д.7, 150쪽.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96쪽.

61) АВРФ, ф.0480, оп.2, д.7, л.149, лл.164~165.

북한 총교원의 약 90%가 이미 재교육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소련군정 3년간 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을 종합해 보면, “1944년과 비교해 볼 때, 교원수가 1944년에 13,828명이었던 것이 1948년에 40,877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교육국에서는 교원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전문적인 강습회 망을 조직하였다. 평양시에 중앙강습소를 창설하여 그곳에서 교장, 교무주임, 중등교육기관의 전 교원들을 양성했으며, 각 도에 도 강습회를 조직하여 그곳에서 교장, 교무주임, 인민학교 교원들을 양성했다. 이러한 단기속성 강습소에서 3년간 18,482명이 양성되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각급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장, 교무주임, 교원, 교수 24,509명이 재교육 강습소를 거쳐갔다.”⁶²⁾

이러한 강습회는 특히 봄,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간과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1945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교원 재교육 사업은 계속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고 북한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46년 4월 4일부터 6일간 신의주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평북교원전체강습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 ‘인류사회의 발전’, ‘조선의 정치 정세’, ‘교육공작의 새로운 실천’ 등을 제목으로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1946년 하기 휴가에 각 도·시·군에서 실시한 교원 강습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 ‘정치 경제학’, ‘조선역사’, ‘변증법적 유물론’, ‘조선사회발전사’, ‘제국주의론’, ‘민주주의 조선교육론’, ‘문학’, ‘교육학’ 등이 강의되었다.⁶³⁾ 강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원들이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적 기능과 지식의 함양보다는 정치적 교양을 중심으로 강습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 재교육의 목적이 구교원들에 대한 식민 사범교육의 청산이라는 차원보다

62) АВР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39.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92~93쪽.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소련군정 기간 내내 새로운 교원의 양성과 동시에 재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해방 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교원양성을 통해 최우선적인 학교정책이었던 인민들의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교원을 확보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낮은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일제사상 잔재의 청산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정치사상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 재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다. 북한지도부는 교육자 대회, 강습회, 정치학습회 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정치사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학교교육개혁의 실천을 보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당과 정권이 제시하는 제 과업을 열성적으로 실천하여 새 북한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 학교교육 기회의 보장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종식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전 한국민의 약 86%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문맹으로 남겨졌다. 한국인에게 제기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실천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제의 수립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문맹으로 남겨진 230만 명의 북한 성인들을 문맹에서 퇴치하는 것이었다.

북한지도부는 일제의 학교정책이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철저히 제한하는 우민화 정책이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육의 계급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의 학교교육 정책이 한국인의 우민화에 덧붙여 봉건적 계층구조에 따라 노동자·농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유산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계급적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다.⁶⁴⁾ 그러므로 유산계층 및 친일분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준 일제 학교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향후 북한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지도부는 학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근로대중의 자녀들을 교육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방안의 강구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조치가 바로 초등의무교육제의 준비였다. 초등의무교육제에 있어서도 특히 노동자·농민의 자녀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구비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이미 1946년 3월의 교육개혁 법령에 담겨져 있다.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인민의 자녀에게 취학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련의 물질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시함.

ㄱ. 5월 1일 전에 각종 중등학교, 전문학교에 하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것.

ㄴ. 노동자·빈농민·일반사무원·소시민 출신인 생도기숙사 및 하숙생들에게 사무원과 동량의 식량을 배급하도록 시급히 조치할 것.

4. 교원들의 생활상태를 향상,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김.

64) В. Н. Попов(배. 엔. 뽀뽀프), 『Борьб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за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45~1950гг (북한에서의 문화건설을 위한 노동당의 투쟁, 1945~1950)』, Диссертация кандидата (Москва, 1955), 113쪽; 일제의 학교정책이 유산계층 및 친일세력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개방되는 계급적 특성을 지녔다는 주장은 북한 및 러시아 저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교육은 엄연한 계급적 성격을 띠었으며 이에 따르는 공공연한 2중 교육체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극소수의 유산계층의 자녀들이 중학교와 전문학교에서 공부한 반면에 절대 다수의 근로인민의 자녀들은 배움의 길에서 제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인민교육의 발전』, 5쪽.

ㄱ. 도·시·군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에게 미불된 봉급액을 조사하여 시급히 급여할 대책을 강구, 실시할 것.

ㄴ. 교직원에게 가급적 사택을 급여하며, 사택수리와 신탄운반에 원조할 것.

ㄷ. 교원에게 노동자와 동량의 식량배급을 시급히 실시할 것.⁶⁵⁾

북한인민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히 노동자·농민과 같은 근로대중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은 물론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학교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소련군정 3년간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경제력이 빈약한 부모의 자녀들은 교육비가 면제된다.

둘째로, 교육비가 낮게 책정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즉 노동자·농민·사무원의 자녀들은 매달 교육비를 인민학교 5엔, 중등학교 10엔, 고등교육기관 20엔을 납부하며, 기타 다른 직종의 자녀들은 인민학교 10엔, 중등학교 20엔, 고등교육기관 40엔을 납부한다.

셋째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반사무원에 준해서 국가의 식료품을 공급받는다.

넷째로, 전문학교, 교원대학,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특히 노동자와 농민) 다수에게 장학금을 보장한다. 1947년에 학생들에게 50억 엔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948년에 전문학교 학생 1만3,000명과 전체 학생수의 거의 50%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3만5,000명이 300엔에서 600엔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총 80억 엔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출될 것이다.

다섯째로, 타지방에서 온 많은 학생들에게 기숙사, 침구용품, 교육기관에 부속된 식당의 공동 식사를 보장해 준다.

65) “학교사업 개선책에 대한 건”, 위의 책, 657~658쪽.

여섯째로, 야간학교 및 직장기술학교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을 보장해 주면서 대학 내에 노동자·농민 출신 청년들을 위해 특별과정을 조직하였다.⁶⁶⁾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초기 조치는 통상 교육기회의 법적 보장이나 학교의 신설과 확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취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물질적 조건을 구비하고 특별히 노동자·농민에게 교육기회를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일제 하의 학교교육 제도권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노동자·농민의 자녀를 학교로 유입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기숙사의 설치, 식료품의 공급, 재산 정도에 따른 교육비의 면제 또는 차등 납부, 장학금 지급, 중등과정의 특별과의 설치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위에서 여섯째의 특별과정의 설치는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3년제의 '예비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1946년 7월 8일에 결정 제40호 "북조선 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결정서"에 의하여 "(5) 노동자·농민의 자녀로서 중등학교 미필한 자를 위하여 대학 내에 3년제 예비과를 설치하며 신입생 200명을 모집함"⁶⁷⁾이라고 명시하였고 동년 9월에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노동자, 농민, 근로 대중의 자제들을 위해 대학 내에 '예비과'를 신설하여 중등교육을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예비과'의 설치는 노동자·농민의 예비과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인민 출신의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 북한지도부의 정책적 배려였다. 이와 같이 근로인민 출신의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 북한지도부의 정책은 국가건설 초기에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각종 학교의 계층적 구성성분의 변화를 통

66) АВТРФ, Ф.0480, оп.4, п.14, д.46, л.41; 두번째 조치와 관련하여 1946년 6월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이미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예로 황해도에 700명, 평안북도에 2,500명 수용이 가능하며 평안남도에 15개의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67) "북조선종합대학 창립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 5, 682~683쪽.

해 근로인민 출신의 교원, 전문가, 당·정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 흔적은 여러 문건에서 보여지고 있다.

위와 같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인민 개개인이 경제적·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물질적, 법적 조건을 강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실제로 학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학교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학교 건설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힘입어 소련군정 기간 학교교육이 놀랄만하게 팽창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은 급속한 교육팽창은 학교의 신축, 교원의 확보, 그 외 교육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학교 유지비는 지방정부가 징수한 인민학교세로 충당되었지만 학교건설 사업에 있어 학교의 신축 및 보수 등은 주민의 기금과 노동력의 조직적 동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과 인민위원회,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인민의 자금과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학교를 건설하였다. 학교건설을 위해 모금된 주민들의 헌금과 성미 총액은

<표 4> 보통교육기회의 확대추이: 1946~49⁶⁸⁾

연도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1944	1,372	877,894	50	17,030		
1946	2,482	1,182,707	217	70,311		
1947	3,008	1,341,018	594	215,914	80	26,080
1948	3,245	1,378,536	772	275,627	140	41,323
1949	3,882	1,474,000	926	353,000	177	66,000

68) 김기석·이향규, “북한사회의 형성과 교육”, 김재한 편,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합 한국』, (서울: 한림과학원총서 63, 1998), 59~60쪽.

1948년에 9억5,000만 원, 1949년에 10억3,000만 원에 달하였다. 북한의 정부 예산은 1948년에 160억3,000여만 원, 1949년에는 197억6,000여만 원이었다. 1949년 교육예산은 20억8,000여만 원이었다. 따라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성금 총액은 정부 예산 총액의 5%가 넘고 교육예산의 절반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었다.⁶⁹⁾

1949년의 북한 교육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성금의 모금이나 주민들의 노력동원 등은 북한당국의 강압에 의거했다기보다는 자발성에 가까웠다. 국가가 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기업소, 학부모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거주 지역 학교를 세우는 일에 참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동원하긴 하였으나 당시 북한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했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 내내 억압되었던 교육 기회의 확대는 인민의 간절한 요구였으며 이에 따른 학교 건설과 자녀들의 취학은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해방 후 북한의 학교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 교실, 학교비품 등의 확보는 교육사업에 대한 인민들의 열성적인 참여의 결과였다.

이렇게 하여 소련군정 기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학교 건설을 통해 급속히 학교팽창을 도모하면서 초등완전 취학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1949년에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950년 9월 초등의무교육제를 법적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지만 초등의무교육제 준비를 위한 시설 및 조치가 전쟁 전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69) 위의 글, 60~70쪽. 김기석과 이향규는 북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학교팽창의 동인을 주민의 교육열을 반영한 국가의 조직적 동원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 교육재정과 학교건설 현황,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학교건설 참여과정을 잘 그려놓고 있다.

3. 학교교육 기관의 국가정영화

다수의 대중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물질적·법적 조건을 보장하면서 대대적인 학교건설 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46년 중반까지도 아직 일제의 학교교육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다. 자본가 및 민족주의자들의 사립학교, 다양한 유교 및 기독교계 학교들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 교육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을 인민위원회에 종속시켜 학교의 국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9월 초에 시인민위원회 교육부의 사업안이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다.

- ① 각종 사립학교를 국유화하여 시교육부 관할로 이양한다.
- ② 실제적인 교육사업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학교감독관을 인민정권 측으로 끌어들이는다.
- ③ 노동자 속에서 새교원간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인민교원 집단을 증가시키며, 마찬가지로 구교원들을 그들의 정치의식 및 업무능력에 상응하여 학교사업에 개별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재교육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인민교원 집단을 증가시킨다.
- ④ 학령 전 교육기관을 확장한다.
- ⑤ 교육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전문교육잡지를 발행한다.⁷⁰⁾

시인민위원회 교육부 사업안은 46년 가을의 북한 학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게 한다.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을 교육개혁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던 당시에 ②, ③항에 의하면, 일제 하의 구교원은 물론 교장, 교감, 주임교원과 같은 구교원간부까지도 학교사업으로 유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일제잔재 청산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

70) 『민주조선』, 1946. 9. 8; Попов В.Н.의 논문에서 재인용.

도 그들이 표방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구교원집단을 활용하게 될 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③항에 의하면 노동자 속에서 새교원간부를 양성하여 다수의 인민교원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북한정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인민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새로운 노동자교원 계층을 양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리하여 1946년에 사범전문학교 2개와 교원대학 8개가 창립되었다. ⑤항에 의하여 1946년 9월 19일에는 전문 교육잡지라 할 수 있는 북조선 교원문화일꾼직업동맹기관지 『인민교육』 첫 호가 발행되었다.”⁷¹⁾

시인민위원회 교육부 사업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첫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①항은 1946년 8월에 발표된 중요산업국유화 법령과 동일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각종 사립학교를 국유화하여 시교육부에서 관할하게 한다는 것이다. 1946년 3월에 발표된 20개조 정강 제16조에 명시된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이라는 학교교육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사립학교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시작했다. 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져 46년 9월 22일에 이미 평양에 3개의 사립학교가 시교육부의 관할이 되었다.⁷²⁾

임시인위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유화를 시도하는 시점이 1946년 9월이라고 볼 때, 일제하의 학교기관과 해방 후 북한 학교기관의 변화를 <표 5>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학교교육 기관의 현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사립학교를 단계적으로 국유화시키하고자 하는 임시인위의 정책은 중요산업국유화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극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1) 북조선인민위원회 편, 『인민위원회대회 중요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47), 97쪽; Попов В.Н.의 논문에서 재인용.

72) 북조선인민위원회 편, 『인민위원회대회 중요문헌집』, 97쪽; Попов В.Н.의 논문에서 재인용.

<표 5> 북한의 학교교육망(1946. 6. 1. 현재)⁷³⁾

교육기관의 종류	일제하의 학교교육망				총계(조선인 운영 학교 제외)
	조선인운영	국립	사립	일본인운영	
1. 인민학교	2,169	2,085	84	206	2,375
2. 중학교	23	15	8	1,134	
3. 고등여학교	21	16	5	15	36
총계(2+3)	44	31	13	26	70
4. 공업학교	13	9	4	7	20
5. 농업학교	38	36	2	2	40
6. 상업학교	8	4	4	4	12
7. 사범학교	5	5	-	1	6
8. 수산학교	2	2	-	-	2
중등교육 총계	110	87	23	40	150
9. 의학전문학교	-	-	-	2	2
10. 공업전문학교	-	-	-	1	1
고등교육 총계	-	-	-	3	3

종류	1946.1.1. 현재 학교망				1946.6.1. 현재 학교망				46.9.1. 새학년도계획			
	총계	국립	사립	학생수	총계	국립	사립	학생수	총계	국립	사립	총학생수
1.	2,254	2,180	74	1,009,661	2,307	2,283	24	1,012—*	2,473	-	-	1,177,287
2.	49	29	20	16,778	92	42	50	25—*	115	-	-	40,096
3.	33	23	10	10,493	53	31	22	11—*	62	-	-	20,444
총계	82	52	30	27,271	145	73	72	36—*	177	-	-	60,540
4.	18	12	6	6,909	23	14	9	7—*	24	-	-	11,054
5.	38	33	5	9,382	47	44	3	10—*	47	-	-	15,372
6.	16	12	4	5,400	13	11	2	4—*	13	-	-	5,579
7.	6	6	-	2,524	6	6	-	2—*	9	-	-	4,558
8.	2	2	-	232	2	2	-	—*	2	-	-	710
총계	162	117	45	51,718	236	150	86	62—*	272	-	-	97,813
9.	2	2	-	309	2	2	-	—*				
10.	1	1	-	229	1	1	-	—*				
총계	3	3	-	538	3	3	-	—*				

* 줄로 표시된 부분은 원문을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밝힐 수 없음. 단, 숫자의 단위는 작·우의 칼럼에 있는 숫자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음. (항목의 내용은 위의 표 항목과 동일)

73) АВГРФ, ф.0480, оп.2, д.7, лл.158~159.

해방 이후 북한에 학교와 학생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중등 교육기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5>에 의하면, 1945년 9월 1일부터 1946년 6월 1일까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민학교망은 9달 뒤에 138교로 늘어났다. 이중에 인민위원회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84교에서 24교로 감소하는 동안 국가경영학교의 숫자가 2,085교에서 2,283교로 198교나 증가하고 있다. 인민학교 수의 두드러진 증가는 상당 부분이 사립학교의 국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1945년 9월 1일부터 1946년 6월 1일까지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중등학교망은 9개월 동안 110교에서 236교로 215%의 증가인 126교나 증가하였다. 인민학교와 달리 중등학교는 사립학교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중등 공립학교가 87교에서 150교로 증가하는 동안 중등 사립학교도 23교에서 86교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1946년 6월경 해방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사회주의 학교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영학교의 단계적 확대’라는 정책이 극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인민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감소하는 대신 공립학교가 증가하였으며, 중등학교의 경우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개혁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다져준 3월의 토지개혁과 8월의 중요산업국유화 법령을 시행한 이후에야 북한이 주장하는 ‘유일교육체제’로의 학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북한교육사에서 “사립교육기관을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와 지도를 확립한 것은 역사적인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법령이 실시된 이후였다”⁷⁴⁾고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1946년 9월 말부터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학교의 국가경영화 정책에 착수하면서 교육사업이 국가의 통일적 관리와 지도하에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46년 9월 말부터 진행된 사립학교의 폐지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조치가 북한의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위의 책, 19쪽.

학교교육 사업을 국가의 독점적 관리 하에 놓이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4.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편찬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당국은 3차례 걸쳐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 개편은 1945년 11월 21일에, 제2차 교육과정 개편이 1947년에 발표된 데 이어 1948년 9월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제3차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구체적 과정안의 제시와 실행은 1949년 9월 1일부터였다. 불과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편한 데는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요구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정치적인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해방 후 새롭게 편성된 교육과정에서는 일본 식민교육의 청산과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은 수신을 인민(도덕)으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일본사를 한국사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편의 첫번째 특징은 한글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과목 과정표에서 국어 시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 점이다.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어와 한국역사, 한국지리 등의 교수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타교과목에 비해 국어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는데, 국어 과목에 배당된 시간 비율이 1945년 말에 27.5%, 1947년에 31.6%, 1949년에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인민학교 개정안에서 국어 시간이 절반에 이르는 50.4%로 책정되어 있었다.⁷⁵⁾ 1945년 말에 27.5%에서 1949년에 36.4%로 10%에 이르는 국어 시간의 증가를 일제 치

75) 위의 책, 51, 54, 56쪽.

하에서 양산된 엄청난 문맹률을 해소하면서 식민교육 청산의 차원에서 국어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 교과서의 성격이 단순히 한글학습으로 한정되지 않고 정치사상 교육을 주입하기에 적합한 교과임을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교육과정의 두번째 특징은 교수요강 작성의 기본 방향으로 과학적 세계관의 형성,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의 형성과 더불어 정치 지향성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교수요강 작성의 기본방향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인민의 투쟁을 정당히 반영하며 학생들의 이해에 적합하게 이를 배열하고 서술할 것”⁷⁶⁾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를 통한 학습경험의 결과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민주주의(사회주의 사상)와 애국주의 사상,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의 함양을 기대하였다.

정치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과목은 아니지만 일반과목으로서, 교수요강 작성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반영한 교과는 국어였다. 국어 교과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1946년 처음으로 편찬된 조선어 교과서에는 반제사상 감정을 고무하며 조국과 인민의 문화를 사랑하며 사회건설에 대한 지향으로 추동하는 자료들이 반영되었다.”⁷⁷⁾ 1949년에 세번째로 개정된 국어 교과서에는 “소련국가와 그 지도자 레닌, 스탈린에 대한 사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상이 뚜렷이 반영되었다”⁷⁸⁾고 기술하고 있다.

세번째 교육과정의 특징은 해방 직후부터 정치교양 과목으로 ‘인민도덕’(인민학교), ‘인민’(초급중학교), ‘사회과학’(고급중학교),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대학교) 등을 신설하고,⁷⁹⁾ 이 과목을 통해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했

76) 위의 책, 58쪽.

77) 정태성, “개정된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의”, 『인민교육』 제5호(1950), 10쪽.

78) 이재경, “개정된 신교과서 취급법”, 『인민교육』 제5호(1950), 56~69쪽.

다는 점이다. 북한의 교육정책은 식민교육을 청산하는 것과 병행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었으므로 학교교육 과정에 이러한 방침을 철저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1945년 과정안에 특수과목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명칭으로 동원되는 학교 내외의 과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8년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특수교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48년 과정안에 독립과목으로 새로이 채택된 ‘헌법’이 초급중학교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옛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어, 지리, 역사 등 다른 과목에서도 정치사상 교양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도록 했다.⁸⁰⁾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서둘러 추진된 사업은 교과서 편찬이었다. 해방 후 각급학교에서 수업이 재개되었을 때, 소련군정과 북한지도부가 최초로 당면한 어려움은 교과서와 교수요강을 편찬하고 수정하는 일이었다.⁸¹⁾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45년 말에 5도 10국행정부에 교육국을 설치하고 교과서 편찬부를 신설하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교과서 편찬 활동은 1946년 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교육국에서는 1946년도에 이용할 114개 과목에 해당하는 183종의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200여 명의 집필자들과 방조자 50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 집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위의 책, 54쪽; 김창호, 『조선교육사 3』, 142쪽.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위의 책, 54~55쪽.

81) 해방 직후 민간업무를 지원한 소련군사령부는 물론 북한인민위원회가 학교교육을 재개하고 정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부딪혔던 어려움이 교원의 부족과 교과서의 부재였음을 당시 대일전 및 소련군정에 참여했던 소련군인들의 회고록이나 북한을 방문했던 소련인 저널리스트의 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학교가 일하기 시작했다. 전에 일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몇 개의 건물을 학교로 양도했다. 학교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것은 한국인 교원의 부족과 한국어로 된 교과서가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M. A. Бабиков(엠. 아. 바비코프), 『На Восточном Берегу (동해안에서)』 (Москва, 1969), 230쪽.

필집단을 구성하였다.”⁸²⁾

또한 임시인위에서는 “교과서 편찬인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한국어로 된 새 교과서를 발행토록 하였다. 1946년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편찬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교과서 편찬을 심사할 감찰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집필한 교과서와 교수요강들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찰을 거쳐 교육국의 고등교육 고문에 의해 승인되는 절차를 거쳤다.”⁸³⁾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편찬사업은 북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쉽게 진척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 민족문화의 부흥과 향후의 발전 과정을 촉진시키고, 모든 영역에 걸쳐 사상 및 과학 수준을 고양시키고자”⁸⁴⁾ 하는 목적 하에 소련군정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소련군정은 북한의 새 과정안과 교과서를 집필하고 제작하는 데 참고가 될만한 소련의 각급학교 강령, 과정안, 교과서와 그 외의 참고자료들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소련의 교육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해방 후 편찬된 북한의 각급학교 교과서 중에서 국어, 역사와 같은 한국 관련 내용이 아닌 다른 교과서들은 거의 소련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북한의 실정에 맞게 개작되었다.⁸⁵⁾

북한의 교과서 편찬 사업은 명백한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교과서는 반드시 ‘진정한 민주주의 노선’에 입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⁸⁶⁾ 편찬 초기부터 교육과 정치와의 연계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교과

8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38쪽.

83) АВНРФ, Ф.0480, on.2, д.7, л.152. 이 문서에 의하면 교과서 편찬과 교수요강의 작성을 위해서 500명 이상의 각 지방 교원, 문화가 및 기타 전문가들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84) АВНРФ, Ф.0480, on.2, д.7, лл.156~157.

85) “외국역사에 대한 교과서의 편찬사업은 거의 대부분 소련교과서들에 의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되었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8·15 해방 후 조선역사학계가 걸어온 길”, 『역사과학』 제6호 (1960).

서 편찬에 있어 시대성과 정치노선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했다. 제1차 교과서 편찬을 지도했던 교육국 편찬부장 신원우는 교과서 편찬의 의의를 언급하는 발언에서, 당시의 교과서 편찬이 당면 과제와 정치노선을 각 교과내용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가장 힘쓴 것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요소를 철저히 숙청하기 위한 교재(내용)를 많이 실은 것”과 “특히 인민, 역사, 국어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와 밀접한 연결성이 있는 교재를 풍부히 실은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⁸⁷⁾

남한의 미군정청이 초기부터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기본정책으로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⁸⁸⁾ 북한의 소련군정은 초기부터 교육과 정치의 연결을 기본정책으로 하였다. 북한 편집부 담당자들은 미국과 남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련과 북한의 우호관계, 해방 이후 변모한 북한의 정치 상황 및 사회 생활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심어주고자 했다.

5. 사회주의 학교교육 체계의 성립

일본은 한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였고 기회가 제공될 경우

86) 신원우, “제일차 교과서 편찬을 마치고”, 『인민교육』 제3집(1947. 4), 29쪽.

87) 위의 글, 30쪽.

88) 미군정청은 초기부터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기본정책으로 강조하였다. 미군정청은 이러한 기본정책에 따라 논란이 되는 모든 문제를 교과서 내용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포하는 요소는 교과서 내용에서 빠지게 되어, 문교부는 결국 이습우화나 미국 교과서에서 몇 구절씩을 번역하여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오옥환, 최정실, 『미군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산업사, 1993), 284~285쪽.

에도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제한하였다.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저급한 조기 직업교육에 한정시키려는 일본의 학교교육 정책은 교육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제치하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수료 후 입시에 의해 각종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수직적이고 복선적인 조직이었다. 식민지 교육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제의 민주화가 급선무였다. 일제의 복선형 학제를 폐지하고 학제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학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의 규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직후 교육개혁 관련 회의가 소집될 때마다 제시된 사안은 바로 '선진 국가의 교육경험을 도입'하여 시급히 북한의 민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제도 개혁의 모델로 소련의 교육을 상정하였으며 이를 준거로 북한의 학교교육 체제와 학제가 마련되었다.

소련의 교육체제를 준거로 북한의 학교교육 체제가 1946년 12월에 마련되었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구상에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취학기회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신학제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초등의무교육의 실시는 물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 교육제도 개편의 기본 원리는 식민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근거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특히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근로대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하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고 교육체제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1946년 12월 18일에 결정 제133호로 “북조선 학교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학제는 ‘선진국가의 교육제도와 경험을 연구하고 또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⁸⁹⁾ 조직되었다. 북한은 이 학제에 대하여

<표 6> 북한의 학제(1947. 9)

연구원				
대학(2~4년)				
고급중학교(3년)	전문학교(3~4년)	특 수 학 교	직장전문학교(3년)	
초급중학교(3년)	초급기술학교(3년)		직장기술학교(3년)	성인중학교(3년)
인민학교(5년)				성인학교(2년)
유치원(3년)			직장학교체제	한글학교(4개월)
학교교육 체계				성인학교체제
			사회교육체계	

“조선에서 처음으로 학교 전 교양, 일반교육, 기술교육, 고등교육 등의 정연한 유일교육체계를 확립하였고 낡은 식민지적 노예교육체도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였다”⁹⁰⁾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유일교육체계’란 재산, 신앙, 성별에 관계없이 기술교육기관이나 일반교육기관으로 자유로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교육 체계의 수립을 의미한다.

신학제에 의하면 학교 전 교양기관으로 1년제 유치반을 두고 초등교육은 5년제로 예비반 1년과 인민학교 4년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5년제 인민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를 포함하는 일반교육 체계가 설치되었다. 기술교육 체계로는 인민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의 초급기

89) “선진국가의 교육제도와 경험을 연구하고”라는 말은 결국 소련의 교육제도를 연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에 인접해 있던 중국공산당은 아직 국가로서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종결될 즈음에 『인민교육』, 『교원신문』 등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구 소련 학제의 경우 1949년까지 초등학교의 연한이 4년이었으며, 49년에 7년제 의무교육제가 발표되면서 초등학교의 최종학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곧 4년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므로 구 소련의 초등학교 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제였으며, 일부 공화국과 민족학교들이 5년제 인민학교를 유지했다. 김동규 역, 『소련의 학교교육』 (서울: 주류, 1985), 42쪽.

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인민교육의 발전』, 19쪽.

술학교와 초급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3~4년제의 중등전문학교를 설치하여 각각 초급 또는 중등 기술자들을 양성하였다.⁹¹⁾ 1947년 6월 28일에는 결정 제49호 “북조선 학교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 일부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46년 12월의 학교체계 일부를 개정했다. 결정 제133호로 마련된 5-3-3-4의 학제와 기본교육제도는 1947년 6월 28일에 일부 개정을 보았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8년 동안 운영되었다.⁹²⁾

북한 교육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학교교육과 별도로 성인교육체계와 직장교육체계를 설치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1947년 4월 8일에 “북조선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 체계에 관한 결정서”⁹³⁾를 채택하여 근로청년들이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이 체계에 의하면 성인교육체계로 4개월간의 한글학교, 2년제의 성인학교, 3년제의 성인중학교를 설치하여 각각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중등전문학교와 고등교육기관으로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직장교육체계에 있어서는 생산현장에 직업교육기관을 부설하여 성인학교나 인민학교 졸업자를 토대로 한 3년제 직장기술학교, 성인중학교나 초급중학교 졸업자를 토대로 한 3~4년제 직장전문학교를 설치토록 하였다. 수료자에게는 각각 초급기술학교와 중등전문학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였다.

새로 개편된 학제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에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복선형 학제로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초급기술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북한지

91) “북조선 학교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 『북한관계 사료집』 5, 670~671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위의 책, 19쪽; 김창호, 『조선 교육사 3』, 127쪽.

92) 1953년 7월 11일에 “내각 결정 제111호”를 발표하여 인민학교의 교육 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임으로서 4-3-3-4의 학제로 바꾼다.

93) “북조선성인학교 및 직장교육체계에 관한 결정서”, 『북한관계사료집』 5, 677~678쪽.

도부는 일제의 식민정책이었던 조기 직업교육이 초급기술학교를 통해 계속 존속되었음을 인식하고 1953년 7월의 학제 개편을 통해 초급기술학교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대신에 전기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초급중학교에서 일반교육을 받도록 하였다.⁹⁴⁾

해방 후 개편된 북한의 학제에 대해 흔히 남한은 개방적 단선형 학제이고 북한은 복선형 학제였다고 규정짓고 있다.⁹⁵⁾ 북한의 학제를 복선형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 복선형 학제는 과거 일제시대 우리나라 학제나 유럽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계급적 성격을 띠었다고 해서 계급적 또는 비민주적 학제라고도 불린다. 북한의 경우 소정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교육 체계가 일반교육 체계와 성인교육 체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복선형 학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양 체계 사이에서 같은 수준의 학교, 혹은 같은 학년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대중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학제는 부정적 의미의 비민주적인 복선형 학제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민족간부' 양성 차원에서 대학을 창설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따라 일하면서 배

94)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이념에 맞는 학제 개편을 거듭하였는데, 1958년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교육 체계에서 기술교육 체계를 없애고 기술교육을 통합한 일반교육 체계로 단일화하여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마르크스의 '종합기술교육'의 원리에 의거해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이 아닌 노동이 통합된 일반 교양교육을 받게 한다는 원리 하에 실업계 중등교육기관인 기술전문학교를 완전히 폐지했다.

95) 단선형과 복선형 학제의 구별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급학교와의 연결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다. 계급적인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체제에 의해서 연결되고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단선형 학제이다. 다른 하나는 옛날의 학제와 같이 상급학교와의 연결관계가 복선적이어서, 학교체계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복선형 학제이다. 이형행, 『신교육행정론』(서울: 문음사, 1997), 194쪽.

울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수립에도 관심을 두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설치와 함께 생산에서 유리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병행하여 발전시켰다. 1949년 현재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을 포함해서 15개의 대학이 설치되었고, 대학 내에 특수한 고등교육기관으로써 부속 야간대학과 통신사범대학, 통신교원대학 등이 설치되었다. 이 결과 “1950년 초 3개의 야간대학과 5개의 통신대학에서 6,015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다. 이로써 당시 북한 총대학생 수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수가 3분의 1을 차지하였다.”⁹⁶⁾ 또한 새로운 직장교육체계에 의하여 1948년에 벌써 131교의 직장기술학교에서 6,894명의 학생을 수용하였고 13교의 직장전문학교에서 2,160명의 기술자를 양성하였다.⁹⁷⁾

이러한 체계는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중등학교 수준에서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설치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직장기술전문학교, 야간대학, 통신사범대학, 통신교원대학의 설치에서, 더 나아가 1951년 이후부터는 각종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체계는 이미 소련군정기에 기본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전 인민의 인텔리화’라고 부르짖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미 소련군정기에 기초가 다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12월에 마련된 북한의 학제는 사회주의 교육의 이념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과 북한 자체의 정치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계속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대중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인텔리화를 지향한 학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96) 김창호, 『조선교육사 3』, 205쪽.

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인민교육의 발전』, 37쪽.

V. 맺음말: 북한의 국가건설과 학교교육의 역할

“혁명의 역사는 학교에 의하여 공고해지며 미래 세대들의 훈련은 혁명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정착시킨다”는 레닌의 말처럼 국가건설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북한통치세력들은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지배적 가치를 주입하고 교화시키는 데 있어 교육을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정권은 일제 식민교육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더 직접적으로는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과거 일제의 교육과 구별되는 북한 인민교육제도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새 교육체제는 소련군정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 집권층의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해방 직후 소련의 대한정책의 기본원칙은 한반도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자국을 위협하는 전진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북한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창출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소련의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북한 교육정책에 분명히 반영되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민주기 이론’적인 국가 건설 방침을 수립해 놓고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민주개혁’을 실시했다.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토지개혁, 이어서 교육개혁은 국가건설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지개혁은 교육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다. 토지개혁으로 학생들의 계층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농민과 노동자 출신 학생들의 각급학교 진학을 촉진시켰다.

토지개혁이 일단락되는 시점인 1946년 3월 말에 “학교교육에 관한 개선책”을 시발로 본격적인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학교교육개혁의 방향은 소련군정 및 북한지도부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여 설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개혁 담당세력은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들로 충원되었다. 교육개혁 담당자들은 개혁 법안의 작성과정에서 소련의 교육경험을 가진 소련계 한인이나 고문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소련식 교육제도와 학교 경험을 본보기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교육의 이념 및 학교교육의 방침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일제잔재의 청산, 과학적 세계관의 배양, 소련에 대한 이해, 소련인민에 대한 사랑, 반제교육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발표된 학교교육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제의 우민화 정책 및 학교교육의 계급적 특성을 타파하는 조치로서 의무교육제 및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초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근로인민의 자녀에게 취학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물질·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노동자·농민에게 경제적 또는 지역적 조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한 기숙사 설치, 식량배급, 고등교육기관 내 특별과정의 설치, 교육비의 차등 납부 등과 같은 조치들은 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유발하였다.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가의 조직적 동원에 힘입어 대대적인 학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해방 3년간 놀랄만한 학교교육의 양적 팽창을 일구어냈다.

둘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정책은 근본적 개편이라는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부족 및 교과서를 빠른 시일 내에 편찬해야 하는 급박함으로 인해 소련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한국 관련 교과서는 창작을 하였지만 여타 교과서들은 소련의 교수요강, 교육강령, 교과서 등을 번역하거나 북한의 실정에 맞게 개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므로 소련의 학문적 성과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교과서 체계를 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북한정권은 김필진의 선정과 심사, 편찬 원칙과 평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과서 편찬을 중앙 차원에서 철저히 심사했다. 그 결과 교과서는 소련의 사상과 학문적 성과, 그리고

북한의 당면 정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북한의 학제는 소련 학제의 영향을 받아 소련군정기에 이미 사회주의 학교교육 체제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지식과 노동의 결부, 교육과 생산의 결합을 학교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인문계 학교와 기술계 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 체계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학교교육과 직장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학교교육 체제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넷째, 사회주의적 학교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립학교를 폐지해서 국가 관할로 이양하는 교육기관의 국유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을 가지고 학교운영사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방 직후부터 학교의 국유화 조치가 제기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하다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인 194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졌다. 북한인민위원회는 1946년 9월부터 사립학교를 폐지, 국가경영화 조치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은 바로 정치교양 교육과 재교육 사업의 실시였다.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의 겨울과 봄방학 동안 일차적으로 교원 재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북조선임시인위가 설치된 후부터 재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교양 교육과 재교육 사업은 학교의 재조직 및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일제 식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사범교육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목적에서 재교육이 필요했다. 교원들은 교육자 대회, 강습회, 정치학습회 등을 통해서 국내의 정치 정세를 연구하고 정치사상을 내면화함으로써 당과 정권이 제시하는 제과업을 열성적으로 실천하였다. 이것은 교육개혁의 실행을 보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자 새 북한사회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은 숙청과 병행하여 재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구인 교육을 조기에 장악하고 국가의 지도이념과 정책으로 교원들을 이끌어 나갔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학교교육개혁이 소련의 정책 및 북한지도부의 국가건설 방향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해서 집권층의 통치 이데올로기 또는 지배 이념을 교화함과 동시에 인민경제 건설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갔다. 북한 통치자들은 국가 건설과정에 있어서 교육이 이데올로기의 구축, 전파,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중요한 견인차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교육개혁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의식한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회 평등과 교육 균등의 원리를 반영한 학교교육 개편안을 작성해서 실천에 옮겼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에 '민주기지'를 건설하며 통일임시정부 수립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했고, 이는 교육분야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남한 교육에 대한 북한교육의 우월성을 선취하고자 했다. 북한은 구 학교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해방 3년 동안 전 교육분야에 걸쳐 일제잔재를 청산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정신 함양 및 민족간부의 육성, 그리고 소련식 북한교육체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 작업은 소련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과는 다른 독자적인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향한 교육이념과 교육체제의 확립은 소련의 이해와 정책은 물론이요, 북한집권층의 지배적 통치이념과 원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학교교육을 통해 '민족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이념의 보급과 확산에 주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남한에 미국

식 민주주의의 이념이 보급된 것처럼,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의 이념을 주입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념에서부터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과 내용, 재교육 사업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교육이 소련의 국익, 당대 지배적 통치세력의 이익과 그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기여함으로써 정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의 분단체제 고착화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고 있던 당시에 북한의 사회주의 지향으로의 학교교육 정형화는 남한과의 교육통합의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러시아연방 문서보관소 자료)

—외무성 문서보관소(АВВРФ)

Φ. 0102, оп.3, п.7, д.27

Φ. 0102, оп.6, п.3, д.13

Φ. 0480, оп.2, п.1, д.2

Φ. 0480, оп.2, д.7

Φ. 0480, оп.3, п.4, д.11

Φ. 0480, оп.4, п.14, д.46

Φ. 06, оп.9, п.59, д.889

—국방성 문서보관소(ЦАМОРФ)

Φ. 19, оп.267, д.8

-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РХИЗНИ)

Ф. 17, оп.128, д.55; д.61; д.205; д.1119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 사상』 (서울: 한백사, 1990).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 분석: 해방~1948. 1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현대북한연구』 (1998년 창간호).

김기석·이향규, “북한사회의 형성과 교육: 1945~1950”, 김재한 편,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합 한국』 (서울: 한림과학원총서 63, 1998).

김동규 역, 『소련의 학교교육』 (서울: 주류, 1985).

『김일성 선집』 제1권, 제2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3, 1954).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김일성종합대학 편,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발행, 1956).

김종철,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연구소 편,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김창호, 『조선교육사 3』 (1926~1953. 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연보』 (서울: 문우인서관, 194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 1996).

북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서대숙, “소비에트 한인들과 북한”, 서대숙 편, 이서구 역,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서울: 태암, 1989).

-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서울: 도서출판합성, 1989).
- 송진파, “새로 제정된 각급학교 규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3호(1950).
- 신원우, “제일차 교과서 편찬을 마치고”, 『인민교육』 제3집(1947. 4).
-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_____,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1998).
-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5).
- 오영진, 『소군정 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오욱환·최정실, 『미군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이재경, “개정된 신교과서 취급법”, 『인민교육』 제5호(1950).
- 이형행, 『신교육행정론』 (서울: 문음사, 1997).
- 장종식, “북조선 교육의 당면과제”, 『인민』 제1권 제1호(1946. 11).
- 정태성, “개정된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의”, 『인민교육』 제5호(1950).
- “정확한 품행 사정을 위하여”, 『인민교육』 제12호 (1954. 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평양, 1955).
-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
- 한근조, 『고당 조만식』 (서울: 태극출판사, 1974).
- 『민주청년』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문』(소련군사령부 기관지).

『Новая Корея (새조선)』, 제1호(1950).

Баби́ков, М. А.(바비코프, 엠. 아.), 『На Восточном Берегу (동해안에서)』 (Москва, 1969).

Ланьков, А. Н.(란코프, 아. 엔.),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북한: 어제와 오늘)』 (Москва, 1995)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소련과 북한의 관계)』 (Москва, 1981).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해방 사명』, Изд.2, (Москва, 1974).

Попов, В. Н.(波波프, 베. 엔.), 『Борьб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й за культур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45~1950гг (북한에서의 문화건설을 위한 노동당의 투쟁, 1945~1950)』, Диссертация кандидата (Москва, 1955).

강상호의 증언(1996년 11월 14일, 1996년 12월 17일).

박일의 증언(1997년 2월 15일).

(Abstract)

The Educational Reforms in North Korea under the Soviet Tutelage

Shin Hyo Sook (Sogang Univers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reforms in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during the shaping period of the North Korean regime afte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Specifically addressed will be the Soviet Un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n educatio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forms in education by the dominant group in North Korea, and the concrete substance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s in school education.

Since the Soviet Union had set up a pro-Soviet Union regime in North Korea, the educational policy and the direction of the reforms in education reflected the Soviet-Union's general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educational reforms were based on the "progressive democratic ideology" which aimed at raising human beings with Socialist minds. The reforms were to supply and foster the Socialist Ideology based on

understanding the Soviet-Union, forming scientific perspectives, cherishing labor, Marxism-Leninism and anti-Imperialism.

After the liquidat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ic educational legacy, the Left-wing centered North Korean leadership drove the school education reforms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and the embodiment of Socialist Ideology. The North Korean education administration, recruited by officers with socialist minds, made reforms based on Soviet-style education system because of assistance from the Soviet-Koreans and Soviet Adviso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reforms were a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the people's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 the revision of legal and physical condition to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the workers and the farmers; the gradual abolishment of private schools and the nationalization of schools; creating Soviet-influenced curriculum and textbooks;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ic school education system; and political-thought education and re-education of the teachers.

North Korea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ic school education system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Soviet-influenced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creates complications for educational integration if the possibility of National unification occurs.

Key Words: North Korea, School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Reform, Progressive Democratic Ideology.